

편집자의 말

## ‘문명의 화산’에서 바라보는 재해와 일본인

조관자 \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현대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명의 화산대’에서 살아간다(올리히 벡). 3·11 동일본대진재는 방재 선진국 일본의 ‘안전신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장면은 자연으로 순환하지 않는 문명의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묵시록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핵에너지와 핵무기가 ‘예상 가능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재해로부터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의 안전시스템은 무엇인가? 자연과 이웃의 위협을 극복하는 것도, 자연과 이웃과 친화하는 것도 생활세계의 영원한 숙제이다.

그 해답을 일본인에게서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의 정치적 경험과 일본인의 행동양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거대한 쓰나미가 동일본의 해안도시를 덮친 그날 이후, 우리는 적어도 두 부류의 영상을 보면서 계속 놀라야 했다. 상실과 혼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어떤 아우성도 통곡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는 이재민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과 핵연료봉의 멜트다운(meltdown)으로 이어지는 비상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쉬쉬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하나는 세계 언론이 칭찬하는 일본인의 절제된 미덕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이웃으로서도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천재가 인재로 돌변한 사태였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하늘 탓도 내 탓도 동요도 하지 않았다. 충격을 삼킨 듯한 그들의 태연한 모습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의 ‘일본

탈출'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서먹함과 냉담함을 상상하는 외국인들은 일본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생존의 위험보다 수난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더 중시하는 시선은 일본사회에 특유한 것일까? 아니면 외국의 언론이 만든 풍문과 이미지의 과잉인가? 그 어느 쪽이든 아니든, 우리의 현실 감각과 다른 일본의 집단적 '침착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재해와 '일본인'의 상관성에 대해 궁금증을 품었을 것이다.

『일본비평』 7호의 특집 주제는 '재해와 일본인'이다. 지진열도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은 '문명의 화산'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침예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관동대지진에서 조선인 학살의 기억을 떠올리듯이, 근대 이후 일본의 재해는 일본인들만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없다. '재해와 일본인'은 지진열도를 벗어나 동시대인들의 삶과 문명사회의 위기를 성찰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지진열도의 문화 상징

일본은 지진, 번개, 태풍이 잦은 나라이다. 환태평양화산대에 속 들어가 있는 일본의 전 국토는 특히 불안정한 지각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쉽 없이 찾아오는 자연의 용맹한 불청객은 일본인의 집단적 무의식과 생활문화에 불가분한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대기 중의 방전현상인 번개(雷, かみなり, 가미나리)의 일본어에서도 집단적 무의식의 한 갈래를 엿볼 수 있다. 雷의 훈독(訓讀)이자 神鳴りと 동음이의어인 '가미나리'는 하늘을 번쩍 가르는 빛과 소리에서 신의 존재를 찾는 일본인의 사상의식을 표현한다. 이렇게 번개(雷)와 신명(神鳴)을 통칭한 일본어의 현상은 인류 보편의 신화적 메타포와도 맞닿아 있다. 모름지기 인류는 널리 하늘을 경외하며 자연현상에 빚대어 인간 스스로를 깨우쳐 왔던 것이다.

일본인론과 일본문화론의 정형구들은 역사적 가변성과 다양성, 보편성을 무시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재해와 일본인'의 상관성을 암시하는 키



〈그림 1〉 안세이 대지진의 참상을 그린 그림(작자 미상, 1854~1855)

위드일 수 있다. 한 예로, 일본인은 봄바람에 흠어드는 사쿠라 꽃잎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한다.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삶보다 ‘깨끗하게 지는’ 무상함에 감동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함으로써 생사가 엇갈리는 순간의 행동양식을 연출할 수 있다. 한편, 화합과 공존을 추구한다는 아마토(大和)의 심성론과 스미와케(分棲)의 사회문화론은 정치적 재난을 통해 얻은 공동체의 경험을 추상화한 측면이 있다. 제사장에게 상징권력이 집중되었던 천황제에서부터 천하통치의 실질권력을 둘러싼 숭한 전쟁의 혼란을 겪은 뒤에 비로소 주군에 대한 충성과 지방권력들이 분서(分棲)하는 에도막부의 평화가 열린 것이다.

문명과 문화, 사회시스템과 인간의 무의식은 여전히 재해의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에도(江戸)시대의 사람들도 쓰나미와 화재의 발생을 지도에 기록하면서 예상 가능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특히 1854년부터 5년 동안 대지진(安政の大地震, 〈그림 1〉 참조)이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에도의 책자(『安政見聞録』나 우키요에(浮世絵) 중에는 재해에 관한 기록과 풍속이 제법 전해진다. 에도 사람들은 메기(鯰 나마즈)가 땅속에서 난동을 부려 지진이 발생한다고 믿는가 하



〈그림 2〉가나메이시(要石)



〈그림 3〉지진액막이 노래(地震よけの歌)



〈그림 4〉요나오시 나마즈의 정(世直し鯰の情)

면, 가나메이시(要石, 〈그림 2〉)가 메기의 난동을 억누른다고도 상상했다. 지진 피해자와 복구사업의 수혜자 사이에 엇갈린 운명은 풍속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3〉은 지진 후에 돈을 번 목재상과 목수들이 메기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풍자했다. 그런가 하면 〈그림 4〉는 난동을 부린 메기가 오히려 지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피해자의 편에 서서 세상의 질서를 그려내고자 했다.

## 대진재와 부흥의 가능성

대지진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서 그 피해가 더욱 막대해진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지진에 10미터의 쓰나미를 몰고 온 동일본대지진은 2만 4천여 명의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를 냈고 여진의 엄습도 위협적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지의 수도권에서 7도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향후 30년 이내에 70%라고 한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의 히라타 나오시(平田直) 교수는 30년이란 수치를 4년으로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예측한다.

수도권의 지진은 일본 역사상 이미 최대의 피해 기록으로 남았다. 1923년 진



〈그림 5〉 関東大震災大番付(鉄湖亭主人編, 1923)

도 7.9의 관동대지진은 도쿄, 요코하마에서 지바, 사이타마, 시즈오카에 이르기까지 모두 10만이 넘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를 냈다. 목조가옥의 소실은 물론, 관공서와 학교 및 산업시설, 서양식 벽돌 건물과 문화재, 그리고 터널 등의 교통망도 붕괴되었다. 라디오 방송은 지진 이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통신이 결여된 생지옥에서 조선인의 방화, 독극물 살포라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조선인 학살도 자행되었다.

전통사회의 소박했던 ‘메기의 난동설’이 근대사회의 음험한 ‘조선인 난동설’로 대체된 것이다. 이후 대재앙을 동반한 지진은 대진재(大震災)라는 용어로 기록되었다. 이 책에서도 지진 경험의 현장감을 전하기 위해 우리말에 없는 대진재라는 용어를 굳이 채택하기로 한다.

관동대진재는 근대국가의 도시건설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지진 이틀 만에 제도부흥원(帝都復興院)이 출범하고 내무대신에 등용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책임 하에 도시부흥계획이 실천되었다. 1924년에 시가지건축물법을 제정하여 내진기준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건설이 진척되었고, 뒤늦은 1948년에는 소방법도 제정되었다. 경제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불황에 진재 불황이 겹치면서 1929년의 대불황이 초래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아무튼 불황 속에서도 도시개발과 부흥이 지속된 것이다.

개발과 부흥은 20세기 후반의 성공신화를 이끈 지구적 패러다임이다. 일본은 전후부흥에 성공함으로써 그 선구적 모범 사례가 되었다. 1995년 한신·아와지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 당시에도 일본은 재정적자를 누적하고 있었지만, 고베의 도시재개발과 시민운동은 정부의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고베의 대진재를 증언하는 흔적은 당시를 시물레이션한 초현대적 시설의 체험학습장(사람과 방재 미래 센터) 같은 곳에서나 발견될 뿐이다.



일본정부는 2012년을 ‘부흥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부흥과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안팎에서 높다. 고베와 같은 인구밀집의 도시가 아닌, 고령화된 어촌 마을에서 현실적으로 재개발 정책을 도출하기도 힘들고 재정 충원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부흥은 없어”라고 말할 자유를 우리는 갖지 못한다.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올리히 벡)는 위험사회의 불평등한 분배법칙은 피재지의 복구 현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센다이(仙台)와 같은 거점도시는 재해경기로 호전되었지만, 많은 이재민들은 일본 국내에서조차 핵폐기물처리 기피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진재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부흥을 바라고 있다.



〈그림 6〉 이와테현 미야코시에 있는 쓰나미 기념비. 1896년과 1933년 쓰나미를 겪은 이 지역에서는, 당시 도달했던 쓰나미의 높이보다 20m 더 높은 곳에 이 비석을 세우고, 이 이하로는 가옥을 짓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소원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원전의 피폭지에 무엇을 재건하든 자연이 문명의 오욕을 씻어 줄 시간을 겹쳐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부흥은 자연의 순환 원리 안에서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제로 근대 이전의 일본인들은 쓰나미가 덮친 해안가를 개발해서 살아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도호쿠 지역의 향토연구가와 역사가들은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이번 쓰나미의 침수지역을 벗어난 경계선에 신사(神社)를 세워 놓았음을 알아차렸다. 옛사람들은 “쓰나미가 몰려오면 육친도 살림도구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말을 바위에 새기고 있었다. 지진 예보가 없던 시대에 스스로 재난을 방어했던 사람들의 지혜는 근대화 이후의 개발이익과 일본인론의 미담 밖으로 밀려났다. 근대화 이후 망각되었던 방재의 지혜는 3·11 쓰나미의 침수지 위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 3·11 이후, '재해공동체'를 살아가다

3·11 이후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침몰'은 시작된 것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되물어야 한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진다. 기초체력도 튼튼한 일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재해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문명사회의 위기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 일본을 재인식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정립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재해와 문명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위험률 분배에서 빈부격차를 논했던 율리히 벡은 다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고 말한다. 문명의 위기는 지구를 공평하게 감싸 돈다. 성장과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지구문명의 화산대'는 닝쿨처럼 뻗어나간다. 전 지구적 재해공동체에서 당면한 실천적 문제는 우리들이 원자력을 포기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 있다. 독일의 탈원전 사회도 프랑스의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원전 54기가 모두 가동을 멈춘 지난 57일 동안은 탈원전의 진짜 가능성을 실험하는 설레는 시간이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주최한 전문가 세미나(6월20일)에서 박종근(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일본인의 5%가 전력 에너지를 떠났다"는 도쿄전력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대진재 이후 일본은 매일 매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공개하며 절전과 전력 수급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최대전력소비량의 15%까지 절전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전력 부족을 호소하는 산업계의 손을 들어 주고 말았다.

'탈원전'에서 후퇴했지만, '탈원전의존'을 향한 일본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요금이 비싼 일본은 생활 속에서 절전·절수를 실천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력소비는 날로 증대하여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대자연을 이용한 전력협력체제의 구축과 녹색성장의 기술 개발이 과제라고 한다. 이러한 대안도 성장과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근대문명의 패

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실천력을 얻으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국경을 넘어 재해공동체라는 자각 속에서 모든 과잉된 욕망과 편향된 정보를 다스리는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 ‘재해와 일본인’을 보는 여러 창

『일본비평』 7호에는 특집 주제와 관련한 9편의 글과 별도의 연구논단 2편을 실었다. 특집 기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출발했다. 첫째, 재해와 조우하면서 살아온 일본인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를 위해 재해의 역사적 경험 속에 깃든 자연관과 인생관, 공동체의식과 재해 표상 등을 발굴한다. 둘째, 3·11이 던진 충격을 우리 자신과 현대사회의 문제로서 성찰하는 것. 이를 위해 위기를 통치하고 생활세계를 재건하는 사회적 실천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안전의 기준 및 부흥의 가능성에 대하여 재고한다.

우리는 일본인을 인종적 고정관념에 가두고, 재해를 일본이라는 영토 안에 묶어놓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자 했다. 따라서 특집 제호의 일본인 표기는 일본인의 다양성을 열어 두고 누구라도 재해의 현장에 설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환기하자는 의도를 품고 있다. 이하 특집 주제와 관련하여 2명의 일본인 연구자도 참여한 가운데, 7편의 논문과 1편의 시론, 그리고 서울대 일본연구소 동일본대진재 연구팀의 현지조사보고서인 ‘연구노트’ 1편을 실었다. 모든 글이 각각의 문제의식으로 ‘재해와 일본인’을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스에키 후미히코 「재해와 일본의 사상」은 재해와 조우해 온 일본의 정신사적 맥락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여 주는 ‘대하서사’이다. 불교사상연구의 대가인 저자는 음진리교와 한신대지진이 일어난 1995년부터 동일본대진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일본의 정신사적 문제를 추적한다. 또한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하늘과 인간 사이에서, 즉 종교적 추상화와 실천적 구상화의 차원에서 어떻게 재해



문제에 대응해 왔는지를 펼쳐놓는다. 고대와 현대 사이의 간극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논문을 통해, 독자는 현대인의 문제적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서 사유의 시공간을 넓히게 될 것이다.

황호덕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수용소 경험과 한국문학의 관련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연구이다. 김동환 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발견과 함께 참신한 해석의 틀이 제시된다. 김동환의 시를 통해 저자는 수용소라는 예외상태를 보편적 역사 문제로 펼쳐내고, 이웃사랑의 윤리적 실천 문제를 환기시킨다. 식민지와 제국, 그리고 3·1과 3·11의 간극 사이에서 이웃의 재난에 어떻게 공명할 수 있을지, 저자의 필치를 좇는 것은 흥미롭다.

도미야마 이치로 「계엄령에 대하여: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은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전개되는 군대의 치안유지활동이 어떻게 일상의 법질서 속으로 재도입될 수 있는지, 유사시 법과 일상에서 재현되는 폭력의 문제를 꼼꼼하게 파헤친다. 3·11 이후 일본의 보수강경파들은 국가비상사태를 상정하며 자위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안전’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그 대격인 이시하라 신타로의 육상자위대 연설에서 계엄령이란 화두를 꺼낸다. 저자는 관동대지진과 오키나와 문제, 그리고 비상(유사)과 일상을 넘나들면서 법질서가 내포한 배외주의의 폭력문제를 감지해 내고 있다.

김려실 「일본 재난영화의 내셔널리즘적 변용: 「고지라」와 「일본침몰」을 중심으로」는 일본에서 재난영화가 만들어진 역사를 소개하면서 재난영화의 서사를 내셔널리즘의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영화 미디어는 대중정서의 향방을 뚜렷이 보여 준다. 핵 공포를 반영한 「고지라」 시리즈, 그리고 대지진 이후의 일본탈출을 상상한 「일본침몰」은 모두 대중동원에 성공한 흥행작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창작 과정과 유통, 내용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일본인들의 정신사적 풍경, 특히 일본사회의 변용과 내셔널리즘의 서사적 흐름을 보여 주는 한 편의 필름과도 같다.

김범성 「‘지진 예보’의 꿈과 현실 : 일본의 지진 예측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일본 지진학계의 지진 예측에 관한 태도를 역사적 맥락에서 소개하고, 사회담론과의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검토한 글이다. 지진 예보는 장기적 관찰에 근거한 통계를 보여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3·11 이후 한국의 기상청은 방사능의 기류예보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일본에서 지진 예보는 더욱 긴장된 작업일 것이다. 저자는 지진 예보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공공적 책임과 갈등이 노정되어 왔는지, 3·11 이후의 일본 지진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을 알게 해준다.

전진호 「3·11 이후의 일본의 원자력과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를 정부와 시민사회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고찰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문제를 재고한다. 완전한 원전 이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원전의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정책변화 및 시민사회의 대응을 밝힘으로써 한국사회의 실천적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조아라 「재해 재건과 창조적 관광정책」은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3·11 이후를 바라본다. 저자는 먼저 1990년대 이후 재해지역 관광부흥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나서, 원전사고에 직면한 동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관광부흥정책을 검토한다. 관광이란 발상이 예외적이지만,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역 자산에 기반한 실제적 부흥의 방법으로서 관광이 등극했다고 한다. 방사능 유출 문제로 힘겨운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한 이 글은 지역 재건을 향한 현지인들의 창조적 관광정책과 현재의 난관에 대해서 생생히 전하고 있다.

강상규의 특집시론 「‘절대반지’로서 원자력의 유혹」은 특집 논문에서 빠진 안전신화와 그 붕괴의 문제를 다룬다. 3·11 이후 일본에서 술한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저자는 3·11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을 정리한 후 3·11 이후에 나온 서적들을 탐색하고 스스로도 해답을 탐구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희생을 치른 피폭국 일본이 어떻게 원전 대국이 되는가. 저자는 원전의 안전신화를 구축한 논리와 그 이

면의 차별과 희생 구조를 파헤치면서 근대 이후 일본시스템에 대해 성찰한다.

이호상의 연구논단 「떠날 수 없는 내 고향, ‘도호쿠’」는 2012년 2월초에 일본 동북 지방을 현지조사한 기록이다. 3·11 이후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장기지역사 연구과제로서 ‘동일본대진재와 사회변동’ 연구팀을 조직하고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 글은 연구팀이 일주일 동안 바라본 재해현장의 복구 모습과 문제점, 피해민들의 상처와 희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진솔한 글은 이웃의 아픔을 연구과제로 삼는 일이 ‘이웃 사랑’의 실천만큼이나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외면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번 7호는 제법 도톰한 분량이다. 특집 원고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가운데 별도로 2편의 연구논문을 보태었다.

우중원의 연구논단 「세계화와 일본의 기업별조합: ‘종업원주권’의 패러독스」는 세계화 이후 가속화된 일본의 양극화 현상을 노동조합의 존재 양태에서부터 분석해 내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 기업통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별조합이 비용절감을 가속시키는 기업행동을 용인하고, 비정규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일본기업의 강점이었던 현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견해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진성의 연구논단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은 한반도와 일본에서 복수의 호칭으로 불리는 재일동포의 호칭문제를 제기하고 그 역사적 함의의 복잡함을 밝히고 있다. ‘재일동포’를 어떻게 지칭할까, 이 문제는 재일동포를 다루는 어떤 글에서도 피할 수 없다. 각각의 호칭에는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개입되기 때문에 논점을 정리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 글은 한국과 일본에서 그 호칭이 갖는 갈등 상황을 재일과 일본사회 내부에서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한일의 경계 사이에서 정연하게 보여 주고 있다.